

---

#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

---

2022. 2. 10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 서

I.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	1
1. 총괄	1
2. 부문별 전망 및 영향	2
II. 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	8
1. 기본방향	9
III. 4기 인구정책 TF 분야별 추진계획	10
1. 생산연령인구 확충	10
2.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	14
3. 고령사회 대비	17
4. 초저출산 대응	21
IV. TF 구성·운영 및 향후 일정	22
[붙임]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계획	23

# I.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

## 1. 총괄

◇ '21년 장래인구추계('20~'70년, 12.9일 발표) 결과,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질 전망

□ [총인구] 총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('29년→'21년)

\* 총인구 변화 = 인구자연증감(=출생아수-사망자수) + 인구 국제순이동

- 코로나19로 ①'20.2분기 이후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\*했으며, ②국가간 이동 제한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\*\*이 크게 줄어든 결과

\* 혼인건수 증감률(전년동기, %): ('20.1Q) △1.3 (2Q) △16.4 (3Q) △11.0 (4Q) △13.6  
(21.1Q) △17.6 (2Q) △5.4 (3Q) △6.8 (과거5년 평균 △4.7%)

\*\* 국제순이동자수(2021년 추계, 만 명): ('20) △5.8 ('21) △6.3 ('22) 0.8 ('23) 4.3

- '20년 5,184만 명이던 인구는 50년간 1,418만 명 감소(△27.4%)하여 '70년 3,766만 명이 될 전망('79년 인구수준)

□ [합계출산율] 최저점이 '21년 0.86명 → '24년 0.70명으로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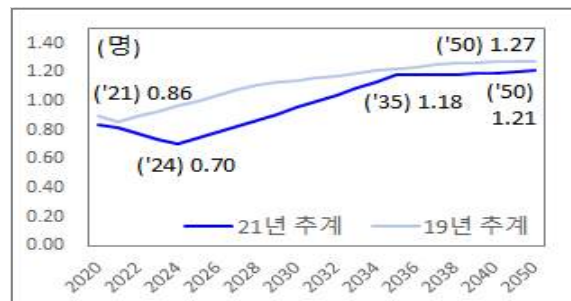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인한 혼인감소가 향후 3~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 미쳐 기존 전망보다 더 오랜 기간 낮은 수준까지 하락
- 합계출산율 최저점은 기존보다 18.6%(△0.14명) 낮아지고, 반등 후 회복 출산율도 '40년 1.27명 → '46년 1.21명(△4.7%)으로 조정

< 총인구 변화 전망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합계출산율 전망 변화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## 2. 부문별 전망 및 영향

◇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①생산연령인구 감소, ②축소사회 도래, ③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여건이 더욱 악화

### 1 생산연령인구 감소

□ [생산연령인구] 향후 5년 감소폭(△177만명)이 기존 전망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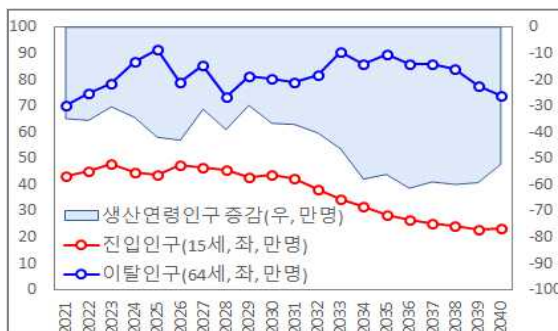
- 생산연령인구는 '20년 3737.9만 → '70년 1736.8만 명까지 지속 감소하여 5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듦 전망
  - 매년 30~40만 명씩 감소하다 '36년 61.3만 명까지 감소폭 확대
  - 특히, 향후 5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예상('19년 인구추계)보다 감소폭(25만명) 확대

\* 생산연령인구 추계 차이('21년-'19년, 만명): ('21) 10.3 ('22) 21.2 ('23) 24.8 ('24) 25.3

-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성장잠재력\*을 약화시킬 우려

\* 잠재성장률('20년 예정치, %): ('01~'10) 4.3, ('11~'20) 2.9, ('21~'30) 1.7, ('31~40) 1.1

< 생산연령인구 변화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생산연령인구 증감폭·증감률 전망 >

	생산연령인구 (만명)	증감폭 (만명 20년대비)	증감률 (20년대비)
2020	3,737.9	-	-
2025	3,561.0	△176.9	△4.7%
2030	3,381.3	△356.5	△9.5%
2040	2,852.1	△885.8	△23.7%
2070	1,736.8	△2,001.1	△53.5%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☞ 여성·고령층·외국인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(量)와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(質) 양성 노력이 시급

## 2 축소사회 도래

### ① [학령인구] 초등·대학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40%이상 감소 전망

- 장기간 이어져 온 저출산 기조와 이로 인한 유소년 감소로 학령인구는 향후 20년간 40% 이상 감소('20년 기준)
  - (초등) 5년간 14%, 10년간 42%로 급격히 감소 후 다소 증가
  - (중·고등) 단기 감소폭은 적은 편이나, 20년후 40%이상 급격히 감소
  - (대학) 5년간 24%, 20년간 51% 감소하여 타격이 가장 클 전망

< 학령인구 변화 추이 >

(만명)	2020	2025	2030	2040
학령인구	788.8	693.7 (△12.1%)	594.3 (△24.7%)	446.8 (△43.4%)
초등학교	272.4	233.7 (△14.2%)	159.2 (△41.5%)	181.4 (△33.4%)
중학교	136.4	140.0 (+2.7%)	115.1 (△15.6%)	77.4 (△43.2%)
고등학교	139.0	136.3 (△2.0%)	132.5 (△4.7%)	70.3 (△49.4%)
대학교	241.0	183.8 (△23.8%)	187.4 (△22.3%)	117.6 (△51.2%)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☞ 향후 5년간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교(△23.8%)와 초등학교(△14.2%) 부문 교육혁신 시급

### ② [병역자원]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향후 5년간 급감 전망

- 병역의무 지닌 20세 남성인구는 '20년 33.4만명 → '25년 23.6만명으로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감소 전망(△29.5%)

\* 만 20세 남성인구(만명): ('20)33.4 ('25)23.6 ('30)23.5 ('35)23.2 (40)15.5 ('45)12.7

- 이후 약 10여년간 20만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,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'40년대초반 현재의 절반 수준(약 12.6만명)까지 급감

- 또한,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연 3.4만명 추가 병력 소요 발생

\* 의무복무개월('21년): (육군/해병대)21→18 (해군)23→20 (공군)24→21

☞ 병역자원 감소 및 병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울 전망으로 군인력 체계 개편 추진 필요

### 3 [지역] 지역소멸 위기 심화 및 10년내 광역시 인구감소폭 확대 전망

-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**지역인구**는 **감소**하고 '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지역불균형 심화

\* OECD 국가 중 지역간 인구격차(TL3)는 네 번째로 높고 인구감소지역 비율도 19.6%로 OECD 평균(10.7%)를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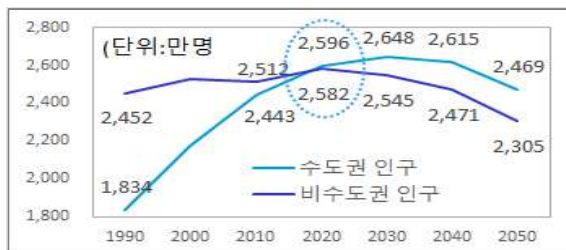
-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이 1년만에 70%가량 급증\*하며 '21년 **소멸위험지역**은 228개 시군구 중 **108개**(47%)에 육박

\* 소멸고위험지역수(%):('13) 2 ('14) 3 ('15) 4 ('16) 5 ('17) 7 ('18) 11 ('19) 16 ('20) 23 ('21) 39

- 수도권-지역간 인구격차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서 **확대** 전망되며, 수도권과 달리 지역거점인 광역시는 향후 지속 인구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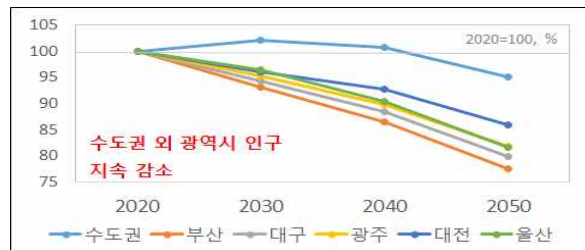
\* 부산, 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만에 10% 이상 감소 전망

#### < 수도권-비수도권 인구변화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('19)

#### < 시·도별 인구 변화 전망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('19)

-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\*는 결혼·출산 기피를 유발하고, 지역은 경쟁력 약화로 인구 유출 악순환 발생

\*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('20년): 수도권 8.0배 > 전국 5.5배

- 특히 지방의 일자리·교육수요 등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방거점도시 쇠퇴로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

#### < 지역별 출산율 비교('20년) >



\*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

#### <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>



\* 자료: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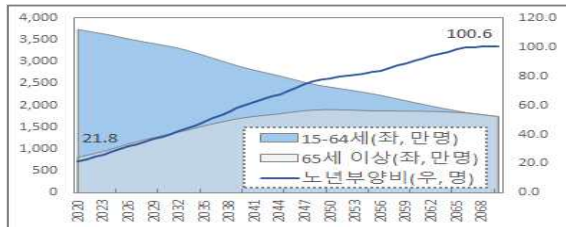
☞ 지방거점도시 중심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멸지역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

### 3 초고령사회 진입

#### ① (고령화)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되며 급격한 고령화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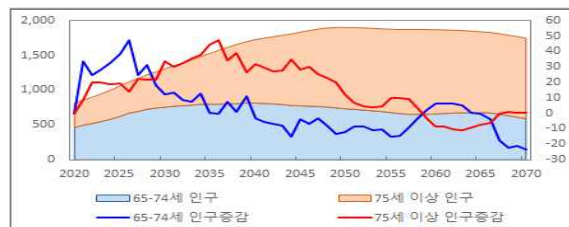
- '20년 베이비붐 세대('55~'63년생, 710만명)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→ '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
  - 노년부양비는 '33년까지 약 2배, '70년까지 약 5배 증가('20년 21.8 → '33년 44.0 → '70년 100.6)하고, 중위연령은 '70년 62.2세까지 상승
- '3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초고령층(75세 이상)에 진입하면서 고령층내 고령화도 심화 전망

< 노년부양비 추이 >



\* 자료 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고령층내 인구 변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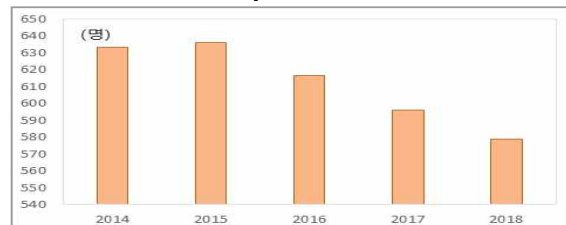
\* 자료 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#### ② (부양부담 증가) 고령층 인프라, 건강권 보장 요구 증가

- '3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초고령층 진입으로 의료·돌봄,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하지만, 수요 증가에 비해 의료·돌봄 인력 공급은 부족하며, 특히, 지역별 돌봄 인력 수급 격차가 큰 상황
-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기 단축('60년→'57년), 건강보험 적립금 축소 전망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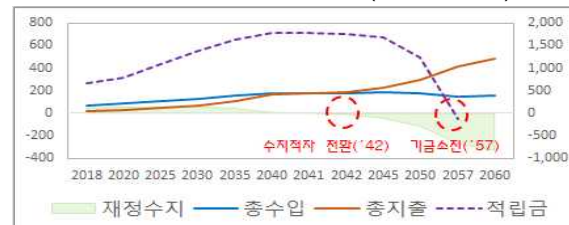
\* '18년 재정계산 결과, 기금소진 시기 3년 단축('60년→'57년)

< 장기요양입원자 1,000명당 요양보호사 수 >



\* 자료 : 보사연(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방안, '19)

< 국민연금 자원 전망('18년 기준) >



\* 자료 : 복지부(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, '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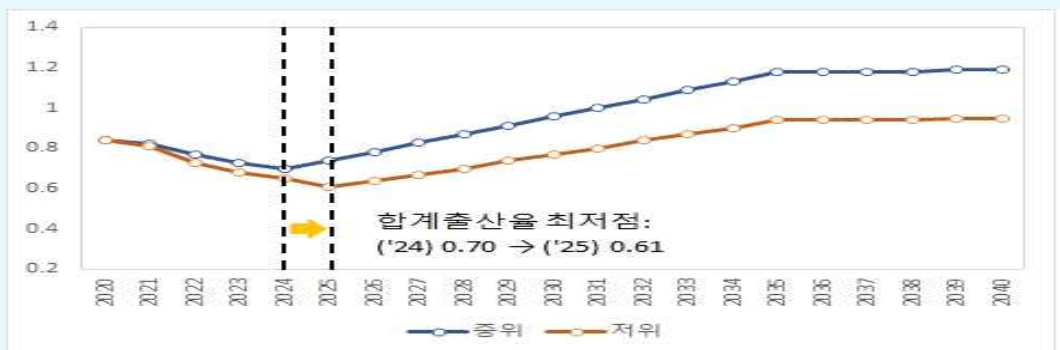
☞ 초고령사회 진입('25년), 베이비붐 세대 초고령층 진입('30년)에 대비 의료·돌봄 서비스 확충, 인프라 확충, 노후 소득보장 등 사전준비 필요



## < 저출산 추이 악화시 영향 >

### 【저출산 추이 악화 가능성】

- 코로나19 장기화, 경제·사회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향후 저출산 추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존재
- 중위추계시 합계출산율은 '24년 0.70이 저점이나, 저위 추계시 '25년 0.61까지 하락하여 출산율 하락의 기간과 폭이 클 전망
  - \* 출산율, 기대수명,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는 수준에 따라 고위·중위·저위 추계로 구분



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### 【저출산 추이 악화시 영향】

-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없이 현 추세 악화시, 생산인구 감소, 급격한 축소사회 도래 등 인구구조 변화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
- ❶ (생산연령인구) 5년간 생산연령인구는 중위추계 대비 21만명 추가 감소(중위 △177만명, 저위 △198만명) 전망되고,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
- ❷ (축소사회) 저출산 추세 악화시 학령인구는 약 10년후부터, 병역자원의 경우 약 20년후부터 약 10% 이상 추가 감소

#### < 생산연령인구 중위·저위 추계 비교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#### < 학령·병역인구 중위·저위추계 차이율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

## 시기·분야별 인구구조 변화 양상

□ 각 분야별로 인구구조 변화 충격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차등적

- ① (~'25년) 출산율 감소, 베이비붐 세대 고용시장 이탈 등으로 생산연령인구, 학령인구, 병역자원 분야에서 충격 발생
- ② ('25~'30년) 일부 광역시 인구 감소 가속화, 소멸위험지역 증가 등 지역불균형 충격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분야 부담 증가
- ③ ('30년~) 베이비붐 세대 초고령층 진입으로 의료·돌봄 수요 확대 및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저하

		2025년	2030년	2040년
생산 연령인구 (‘20년 대비)		177만명 감소 (△4.7%)	357만명 감소 (-9.5%)	886만명 감소 (-23.7%)
출산율	중위	0.74	0.96	1.19
	코로나19 장기영향	0.52	0.64	0.89
학령인구 (‘20년 대비)	초등	38.7만명 감소 (△14.2%)	113.2만명 감소 (△41.5%)	91.0만명 감소 (△33.4%)
	중고등	0.9만명 증가 (+2.6%)	27.8만명 감소 (△10.4%)	127.7만명 감소 (△46.4%)
	대학	57.2만명 감소 (△23.8%)	53.6만명 감소 (△22.3%)	123.4만명 감소 (△51.2%)
병역자원 (20세 남성, ‘20년 대비)		9.9만명 감소 (△29.5%)	10.0만명 감소 (△29.8%)	17.9만명 감소 (△53.7%)
지역	5대 광역시 인구 <sup>①</sup>	30만명 감소 (△3.0%)	54만명 감소 (△5.4%)	110만명 감소 (△11.2%)
	소멸위험 지역 <sup>②</sup>	83개(‘17년)		229개(‘47년)
고령화	고령인구 (‘20년 대비)	1,059만명 (+29.8%)	1,306만명 (+60.2%)	1,725만명 (+111.5%)
	노년 부양비	29.7명	38.6명	60.5명
국민연금 수지 <sup>③</sup>		55.5조원	59.4조원	11.1조원 (2042년 적자전환)

\* ①: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(‘20년 대비),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(‘19)

②: 감사원(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, ‘21) / ③: 복지부(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, ‘18)

\*\* ①~③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## Ⅱ. 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

◇ 4기 TF는 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와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한 3단계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운용

\* 1기는 전 분야 대상 방향성 제시, 2기는 1기와의 연속성 유지·보완에 초점  
3기는 3대 인구리스크(인구감소, 지역소멸, 초고령사회 임박) 대응

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대응 강화			
현황·영향	논의방향 및 주제		
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	① 생산 연령 인구 확충	여성	▶ 코로나19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방안 ▶ 양성평등 노동시장 여건 개선방안
		외국인	▶ 코로나19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 ▶ 미래수요 대비 중장기 인력수급파악 및 활용
		고령층	▶ 고령자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및 제도개선 ▶ 고령자 연령계층별 고용활성화 지원
		생산성	▶ 신기술 분야 청년 인재양성 방안 ▶ 공정한 노동전환 등 생산적 노동시장 구현
학령인구· 병역자원 감소	②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	학령인구	▶ 교육부문 재원·시설·인력 효율화 ▶ 대학 적정규모화 가속화 및 자생력 강화 ▶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
병역 자원		▶ 간부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▶ 군 인력 충원체계 개선	
지역		▶ 초광역권 성장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▶ 소멸위험지역 자립역량 강화	
지역 소멸	③ 고령 사회 대비	재정	▶ 인구구조 변화 고려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▶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 관리
베이비붐세대 고령층(65세) 진입		의료· 돌봄	▶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▶ 의료·돌봄인력 확충 및 중앙·지자체 연계 협력
		노후 소득	▶ 노령층 은퇴후 소득 종합적 파악 ▶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
		제도· 인프라	▶ 노인복지정책 다층적·장기적 방향 검토 ▶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육성 지원
베이비붐세대 초고령층(75세) 진입	④ 초저 출산 대응	지원 강화 및 환경 조성	▶ 결혼·출산 인센티브 강력 보완 및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 ▶ 중앙·지자체 협업 통한 지원 재정비·강화 ▶ 일자리·주거·교육 등 구조적 이슈 대응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성 제고
저출산 장기화			

## 〈 기본 방향 〉

- ◇ 4기 TF에서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'초저출산 대응' 분야를 논의과제에 포함
- ◇ 또한,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(priority)을 고려하여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

1] **(논의분야)** ①생산연령인구 확충, ②축소사회 적응력 강화(지역소멸 포함), ③급속한 고령화 대응, ④초저출산 대응의 **4대 분야**

- ① **(생산연령인구 확충)** 여성·고령자·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 기존 전망보다 악화된 생산연령인구 확충
- ② **(축소사회 적응력 강화)** 저출산 지속에 따른 학령인구·병역자원 감소, 지역인구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축소사회 대응
- ③ **(고령화 대비)** 고령층 복지제도 개편, 돌봄·의료 서비스 확충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고령층 인구 급증 대비
- ④ **(저출산 대응)** 코로나19 영향으로 악화된 저출산 기조가 수년내 반등할 수 있도록 출산율 대응방안 논의(4기 TF 추가 분야)

2] **(대응시기)** 인구구조 변화 충격의 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라 대응을 위한 시기를 **3단계로 구분**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

- ① **(단기)** 생산연령인구·학령인구 등 **당장 5년내 인구구조가 급변**하거나 대응이 시급한 분야
- ② **(중기)** 10년 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만,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**지금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**한 분야
- ③ **(장기)**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**지금부터 제도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**가 필요한 분야

※ 중장기 과제는 추진전략 또는 구체적인 논의 일정 제시

### Ⅲ. 4기 인구정책 TF 분야별 추진방향

#### 1. 생산연령인구 확충

##### ① **단기**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고

#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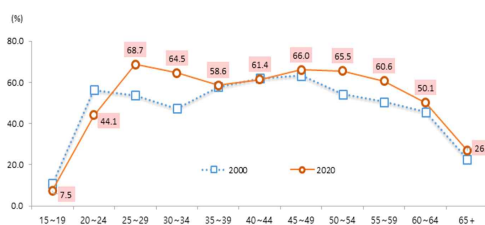
- 육아·돌봄 부담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,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·창업지원, 양성평등 근로환경 구축 추진

#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2기) 육아휴직 분할횟수(1회 → 2회) 확대,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, 예술인·특고 출산급여 지급, 육아휴직부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·인센티브 확대 등
- ▶ (3기) 초등돌봄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,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구축,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중장기 검토,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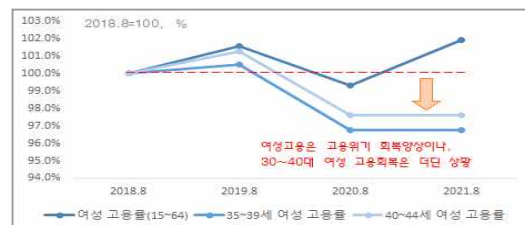
##### 정책여건

<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>



\*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<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률 추이>



\*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- ✓ 여성 고용률은 상승추세('00년 47%→'20년 50.7%)이나, 성별격차는 20년간 3.7%p 감소에 그쳤으며, M-커브 현상 지속 → 여전히 여성을 돌봄주체로 전제

\* 여성경력단절 사유는 육아(42.5%)·결혼(27.5%)·임신·출산(21.3%) 순('20년, 통계청)

- ✓ 전반적 여성 고용이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양상이나 30-40대 회복은 더딘 상황

#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 ①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 방안

\* 여성 희망시 이전 경력과 무관하게 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(기업 인센티브, 유망분야 특화 직업훈련 등)

#### ② 여성이 결혼·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

#### ③ 돌봄·육아부담을 근본적·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

\* 육아병행 가능한 근로형태 확산, 보편적 돌봄체계 중장기 검토 등

## 2 단기 외국인력 활용 강화

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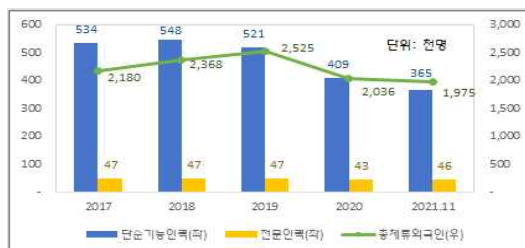
- 우수 외국인재 유입장벽 완화, 다양한 방식의 필요인력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고,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, 성실재입국 제한기간(3개월→1개월) 단축 등
- ▶ (2기)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,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(E-9) 취업 허용, 범정부 외국인통계 DB구축 등
- ▶ (3기)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,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,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원격근무자(telecommuter) 비자 신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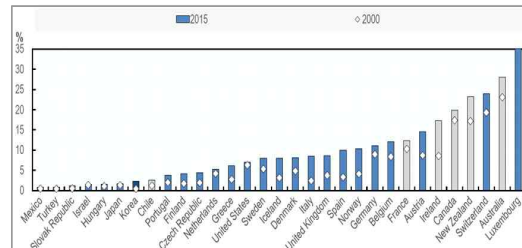
#### 정책여건

< 국내체류외국인 현황 >



\* 자료: 법무부, 출입국자 및 외국인통계

<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>



\* 자료: OECD (Recruiting Immigrant Workers: Korea, '19)

- ✓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'19년 253만명이었으나,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'21.11월 198만명까지 급감('19년대비 21.8% 감소)
- ✓ 한편,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.3%으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하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('00년 0.5% → '20년 3.3%)

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- 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 방안
- ② 향후 변화하는 외국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파악체계 및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방안
- ③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방안(비자·세제·정주여건 등)
- ④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·정착지원 방안

### 3 단기 + 중기 고령자 고용 활성화

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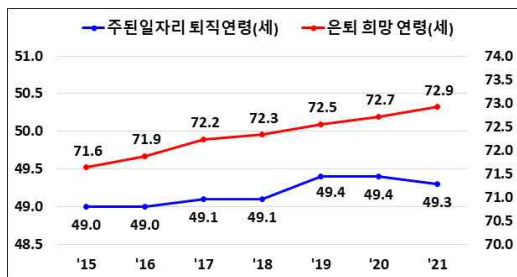
-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 고용연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·고령자 지원을 강화

#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,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,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확대,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
- ▶ (2기)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모델 도입,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(20.5월),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마련 등
- ▶ (3기)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추진, 고령자 고용장려금 및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등

#### 정책여건

##### < 퇴직 및 은퇴희망연령 변화 >



\* 자료: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

- √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정년보다 낮음('21년 49.3세) 반면, 장래근로희망연령은 빠르게 증가\* 추세

\* '15년 71.6세 → '21년 73세

- √ 이외에도 베이비붐 세대 규모(710만명, '20), 높아진 학력수준\* 등 고려시,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에 적합

\* 베이비붐 세대 학력 고졸이상 55.6% 대졸이상 20.4%

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# 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\* 추진 및 고용·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준비 방안

\* 경사노위 연구회('21.10~'22.2 운영)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추진

##### ② 고령자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고용활성화 지원 방안

\* 現 고령층 대상 공공일자리 내실화, 미래 고령층(現 신중년) 대상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등

##### ③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개선, 취업정보 확대 등 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



#### 4 단기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질적 보완

#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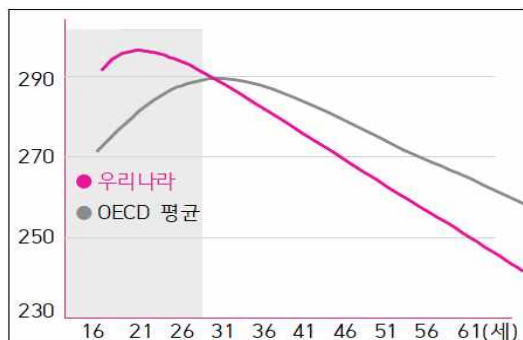
- 평생·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, 성인 학습 관련 규제완화, 평생학습 법령 정비 등 추진

#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(학습경험인증제 등),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등
- ▶ (2기) 평생·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간 단계적 연계·협력 추진, 대학-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
- ▶ (3기) 평생교육바우처·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, 전국민 평생학습권 위한 법령 개정, 대학 학사제도 규제 완화, 전문대-폴리텍 협력채널 마련 등

##### 정책여건

<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>



자료: OECD(PIAAC, '13)

- ✓ (연령별 역량변화) OECD 평균에 비해 성인기 역량감소가 큰 상황
- ✓ (인력양성) 고급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청년인재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훈련기회 부족
- ✓ (노동시장) 산업구조 변화,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다양한 고용형태, 비전형 근로 증가, 여성·고령층 고용 활성화 등 위해 노동시장 생산성 제고 요구 증대

#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- ① 교육·훈련과 취업 간 연계 집중 지원, 인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신기술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방안
- ② 개인-대학-기업-훈련기관 각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사회 구현 방안
  - \* 예: (개인) 평생학습 휴가제 정착, 직무훈련비 지원강화 등
  - (대학) 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체제 전환 가속화 등
- ③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등 생산적 노동시장 구현 방안

## 2.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

### ① 단기 학령인구 감소 대응

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-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교원 수급기준 및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지원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,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, 성인학습자 대상 경직적 학사제도 개선 등
- ▶ (3기) 대학 유형별 적정 규모화 촉진 및 한계대학 청산지원 방안 마련, 정원 등 규제완화, 지자체-대학 협업체계 구축 등

#### 정책여건

- √ (초등) 최근 교부금 확대로 양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, 학습결손 및 학습 격차, 증가하는 돌봄 수요 등 질적 개선 요구 지속
- √ (중고등) 입시경쟁, 대학 內 정원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·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배출에 한계
- √ (대학) 대학 유형별 적정 규모화 등 체질개선 지원 전략이 마련되었으나,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보다 과감한 정책 필요
- √ (재정) 학령인구 감소 및 국가재정 여력, 교육 부문별 재정투자 불균형 등으로 국화·감사원 등에서 교육재정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는 상황

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 ① (초등)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자원·시설·인력의 전반적 효율화 및 공교육 역할·기능 강화 방안

\* 지속가능한 돌봄·교육 시스템, 기초학력 강화, 사교육 수요를 과감히 흡수할 수 있는 교육운영방안 모색 등

#### ② (중고등) 소모적인 경쟁 대신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방안

#### ③ (대학)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, 정원의 합리적 조정 등 대학 자생력 강화 방안

#### ④ (교육재정) 학령인구 감소, 적정 교부금 수요, 교육부문간 자원배분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

## 2 단기 병역자원 감소 대응

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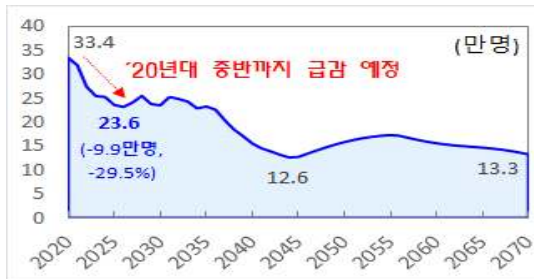
-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군 구조를 병역집약적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 추진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역구조 재설계,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, 대체복무 감축, 간부 여군비중 확대 및 양성평등 근무여건 조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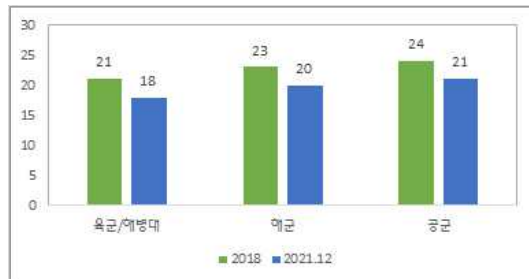
#### 정책여건

< 20세 남성인구 변화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의무 복무개월 수 >



\* 자료: 국방부('21)

- ✓ 병역의무를 지닌 20세 남성인구는 향후 5년간 큰 폭( $\Delta 29.5\%$ )으로 감소 전망되고, '35년부터 다시 큰 폭 하락하여 '40년대 초반 현재 절반 수준으로 급감
- ✓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 가중

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 ① 중간계급 간부 중심의 병역구조 정예화 방안

#### ② 군 인력 충원체계 개편을 통한 중장기 병역자원 확보안

\* 예: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 완화, 상근예비역 감축 등

#### ③ 드론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력구조 개편안

#### ④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

\* 예: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등

### ③ 중기 지역소멸 대응

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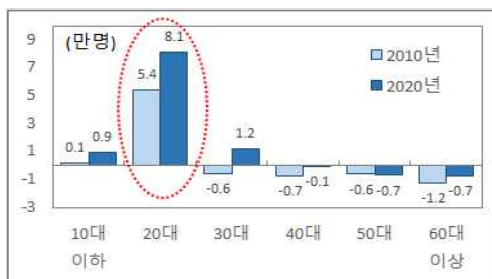
- 빈집의 효율적 관리,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자립 활성화, 초광역권 형성 지원 등으로 지역공동화 및 지역소멸에 대응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, 민·관 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, 공공·생활서비스 집약순환 연결체계 구축,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
- ▶ (2기)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(~'22년),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, 대규모 자본필요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
- ▶ (3기) 거점도시 집중 육성, 초광역권 계획 수립,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검토,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등

#### 정책여건

< 연령별 수도권 유입인구 >



\* 자료: 통계청 인구이동통계

- ✓ **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**(20년 청년층 56.2% 수도권 거주) 및 경쟁 심화, 미래 불안 등으로 **수도권 출산율 크게 하락**→**전체 출산율 하락 초래**  
\* 전국 출산율(0.84) > 서울 출산율(0.64)
- ✓ **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및 삶의 질**(주거·문화·교육·의료 등) **제공 여부가 좌우**

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# ① 초광역권의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

\* 도심융합특구 활성화, 수도권 인구·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

##### ② 소멸위험지역 지원,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, 도시-지역 간 매칭·협력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방안

##### ③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 중장기 대응전략

### 3. 고령사회 대비

#### 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

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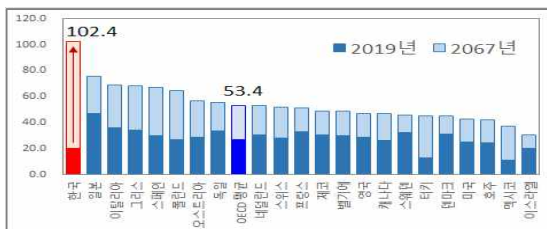
- 장기재정전망을 조기 착수하고,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논의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장기재정 전망 조기 착수 및 개편방안 논의,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, 적정 보험료를 결정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
- ▶ (3기)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

#### 정책여건

< 주요국 노년부양비 변화 >



\* 자료 : 통계청('19년)

<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>



\* 자료 : 국회예산정책처

- ✓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가 '67년 102.4까지 빠르게 상승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
- ✓ 4대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)은 '40년부터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, 건강보험의 경우 적립금 축소 전망

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- 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
- ②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, 동시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
  - \* 필요시 국민연금 '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방안 검토
- ③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적으로 억제

## ② 장기 고령층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 확충

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- 비대면의료·재택의료 강화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2기)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신기술 개발 지원,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확대, 돌봄로봇 700대 보급 완료
- ▶ (3기) 의료·요양·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시범도입 및 예방적 서비스 통합 제공, 재택의료센터 도입,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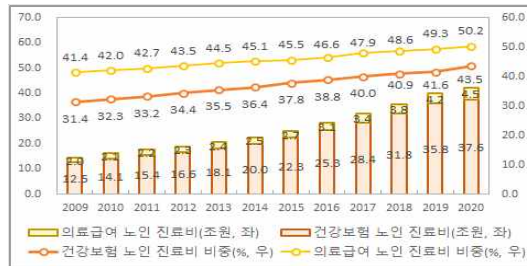
### 정책여건

< 고령인구 변화전망 >



\* 자료 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의료비 지출 추이 >



\* 자료: 건강보험공단

- ✓ 베이비붐 세대('55~63년생)가 '30년에는 후기 고령층(75세 이상)에 진입하면서, 10년 후 의료·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 예상

\* 75세이상 후기고령층 인구: ('20년) 349.9만명 → ('35년) 730.1만명 (+14.4%)

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- ① 고령층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가 필요도에 따라 연속적·통합적 제공될 수 있는 연계망 강화 방안

- ② AI·IT 등 신기술을 통한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 공급능력 혁신 방안

- ③ 의료·요양·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확충 방안

\* 노인돌봄분야 요양과 간호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체계 검토 등

- ④ 중양-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의 적정 서비스 규모 유지 방안

\*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중양과 지자체간 기능·책임 명확화, 서비스 조정·연계 방안 마련 등



### ③ 장기 노후소득보장 강화

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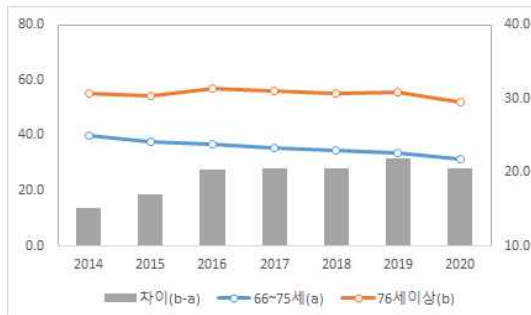
- 퇴직·개인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제고, 주택연금 활성화 등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구축

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(60세→55세 등), 지급액 확대 등 주택연금 활성화, 퇴직·개인연금 가입률·장기수익률 제고 등
- ▶ (2기)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, 보험 가입연령 상향 조정 검토, 「노인금융피해방지법」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구축 추진

#### 정책여건

< 고령층내 빈곤율 격차 >



\* 자료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- √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**노인빈곤율(43.2%, '19년)**이 OECD 국가 (13.1%, '18년) 중 **가장 높은 수준**
- √ 노인빈곤은 **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화**
  - \* 65세~74세 전기 고령층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간의 빈곤율 격차는 20%p 이상
- √ 직장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**소득이 없는** 소위 '**소득 크레바스**' 기간 발생

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- ❶ 퇴직연금·개인연금 역할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**공적연금을 보완**하는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

\* (퇴직연금) 도입 확대 및 운용수익률 향상, (개인연금) 가입 유인 강화 등

- ❷ '**포괄적 연금통계**(공·사적 연금에 대한 종합통계)' **개발 추진** 등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 **종합적 파악** 방안

#### 4 장기 고령층 친화 제도·인프라 개선

##### [그간 인구TF 주요대책]

- 고령층 교통·주거 개선, 고령친화 산업 육성,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등 고령층 친화 제도·인프라 개선 추진

##### ◇ 1~3기 TF 주요대책

- ▶ (1기) 고령친화 신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, 고령친화도시 조성, 노인복지정책 참여연령 하향 조정 및 노인복지정책 장기방향 검토
- ▶ (2기)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, 고령친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유망산업 발굴·육성,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

##### 정책여건

###### <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추이 >



\* 자료: 복지부, 노인실태조사

##### ✓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기준 변화

\* '20년 기준 노인의 74.1%가 노인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('20년 노인실태조사)

##### ✓ 고령사회 진입은 기존 산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의료·돌봄, 여가 등 새로운 신사업 창출의 기회

\* 고령친화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망('14년, 보사연): ('12) 2.4% → ('18) 3.4% → ('30) 6.2%

#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 ① 초고령화 시대 대비 주거·교통·사회참여·문화 분야 등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다층적·장기적 방향 검토

\* 고령층 통계 연령 세분화 등을 통한 연령 계층별 대책 마련 검토, 노인 복지-일자리 정책 연계 등

#### ②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성장할 고령친화 제품·서비스시장 수요 발굴 및 체계적 육성 지원 방안

#### 4. 단기 초저출산 대응

##### [그간 초저출산 대응]

- 그간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에서 4차례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을 하락에 대응하여 왔음
- 4차 기본계획('21~'25)에서는 부부가 아이 낳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9.5조원을 투입하는 5대 패키지 과제 수립

##### <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>

부부 육아휴직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부공동 육아휴직 보너스제 (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)</li> <li>* 부모 모두 육아휴직(만세 미만) 사용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%(월 최대 300만원) 지원</li> <li>· 육아휴직 지원금(중소기업 최대 월 200만원)</li> </ul>
영아수당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0-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('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 지급)</li> </ul>
첫만남 꾸러미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</li> <li>·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60만원 → 100만원으로 확대</li> </ul>
공보육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개 확충 → '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</li> </ul>
다자녀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</li> <li>·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</li> </ul>

⇒ 4기 인구TF에서는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 내 반등시키기 위해 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

##### [4기 인구TF 논의과제(案)]

#### ① 결혼·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강력 보완방안

\* 결혼·출산에 차별적인 세제·금융제도 개선, 난임가정 지원 확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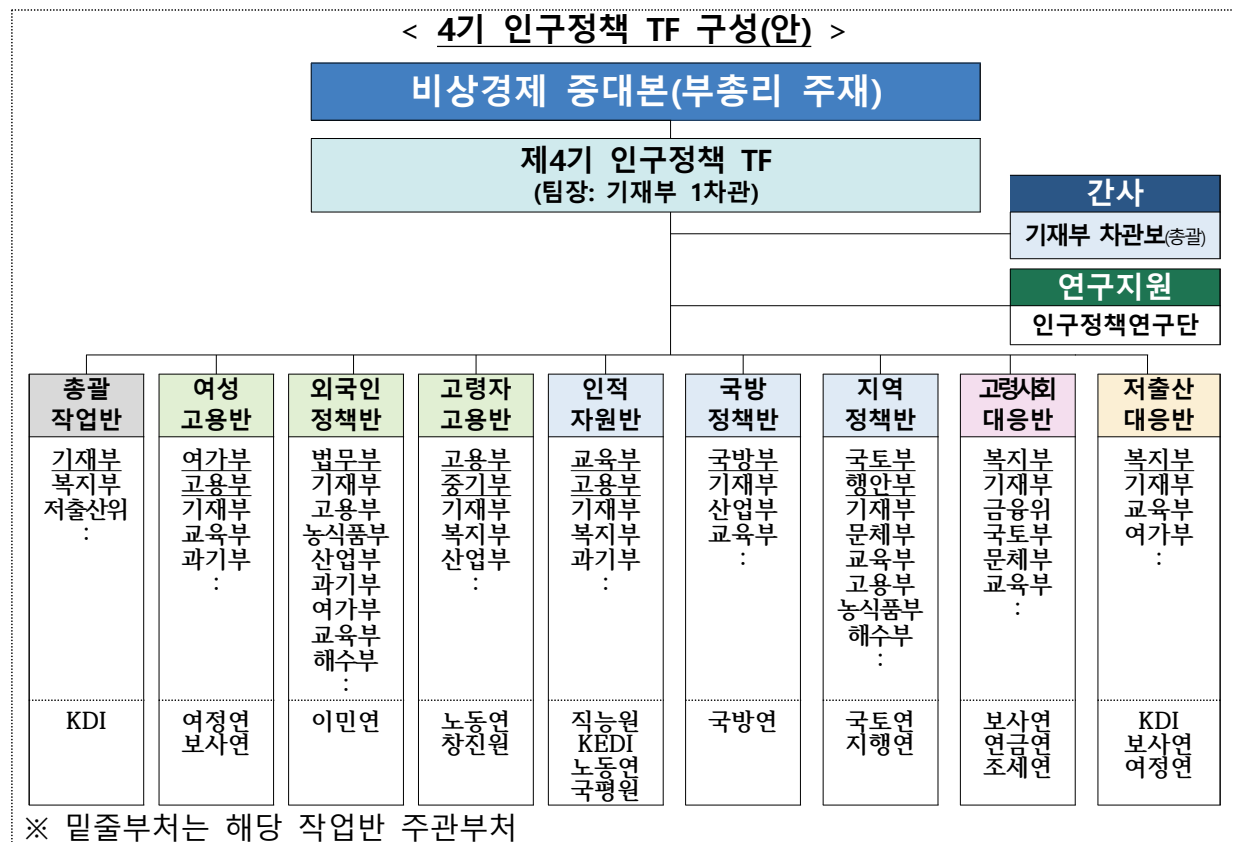
#### ②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, 육아·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 방안

#### ③ 중앙정부-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보다 재정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혼·출산 지원 혜택 재정비·강화

#### ④ 중장기적으로 일자리·주거·교육·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 대응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

## IV. TF 구성·운영 및 향후 일정

- (구성) 본회의 + ①총괄반 · ②분야별 작업반 + 인구정책연구단
  - 관계부처 + 국책연구기관 + 민간 전문가(학계) 등 참여
  - ※ 구체적인 작업반 구성(간사단 구성 등)은 TF에서 최종 조정·결정
- (운영) 작업반별 완결된 대책 마련(작업반장 : 주관부처 1급)
  - TF 본회의 승인·발표('22.3분기부터 순차 발표)
  - (총괄반)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제시, 부처간 이견 조율 역할
  - (작업반)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, 과제별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 마련
  - (인구정책연구단) 총괄반과 협업하여 인구정책 중장기 비전 도출을 지원하고, 각 작업반과 매칭하여 연구·분석자료 등 전문성 제공



- (향후 일정) 2월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및 작업반 출범
  - 3~6월 작업반 내 과제 발굴 및 전략 논의
  - 7월 이후 총괄대책 및 분야별 대책 순차적으로 발표
  - \* 인구TF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책 발표 일정 결정

**1 [5대 패키지 개요] 영아기 집중투자 및 다자녀 지원 확대**

- (목적)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생시기~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(2자녀 이상) 가구 지원도 확대
- (추진방향) 영아기 현금지원 확대 및 유아기 공적 돌봄 확충
  - 직접양육이 권장되고 개인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음에도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영아기에 집중투자
    - \* 직접양육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, 영아수당, 첫만남이용권 등 비용지원 강화
  - 2세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인프라 양적 확충
    - \*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의 확대와 방과후 온종일 돌봄 확대를 통하여 (영아기) 휴직 & 직접양육 → (유아·초등기) 복직 & 공적돌봄 보편화
  - 다자녀 주거 및 장학금 지원 기준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

**<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>**

- ① **영아기 집중투자(영아수당)** : '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 신규도입
- ② **영아기 집중투자2(첫만남 꾸러미 I·II)** :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 (60→100만원), '22년 아동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 신규도입
- ③ **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** : 3+3 육아휴직제,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, 중소기업 지원 확대,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강화
- ④ **공보육 강화** : 국공립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등 확충하여 공보육 50% 달성
- ⑤ **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·교육지원 확대** : 전용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 및 지원기준 2자녀 확대,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지원('22~)

**2 ['21년 추진실적] 영아기집중투자 기반 마련 및 다자녀 지원 확대**

**■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도입 기반 마련**

- 신설 제도 도입 근거마련 위한 법령 개정
  - (영아기 집중투자) 아동수당법(12월),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(12월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6월) 개정
  - (육아휴직 3+3) 고용보험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12월)

○ 신설 제도 도입·강화 위한 예산 편성·확보

- (영아기집중투자) 예타 통과(8월 조건부) 및 국회 예산안 의결(12월)에 따라 영아수당 3,731억원 및 첫만남이용권 3,731억원 확보(국비)
- (육아휴직) 육아휴직 강화(3+3 부모육아휴직급여, 소득대체 강화) 위한 1조 5,806억원, 예술인 등 출산전후급여 지원 강화 위한 234억원 확보

■ 영유아기 공적 돌봄 확충

○ 아동돌봄기관 공공성 강화

- (국공립어린이집) '21년 515개소 확충\*, 농어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우선전환, 보육료의 보육목적 외 사용금지 근거 마련 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)
  - \*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(공공보육이용률(%)) : ('17) 373(26.0) → ('19) 654(28.5) → ('20) 581(32.1) → ('21) 515(35.3)
- (보육체계 개편) 기존 한 명의 담임교사로 운영되던 보육과정 및 시간을 구분한 기본보육,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('20년) 및 안착
  - \* 전담교사 배치(30,299명), 교사 업무부담 경감(1인당 아동 ('17) 4.3명 → ('21.6월) 3.7명)
- (직장어린이집) '21년 총 1,248개소 운영 및 총 58개소에 설치비 147억원 지원

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·교육 지원 확대

○ 다자녀가구 주거안정

- (건설임대) 4인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 전용면적 60~85㎡의 질 좋은 중형평형 공공임대주택 0.1만호 사업승인
- (매입·전세임대) 다자녀 매입·전세임대주택 공급유형 신설 및 공급\*, 보증금 할인 등 임대료 부담완화\*\*

\* 매입임대 1.5천호, 전세임대 2.5천호 공급 / \*\* 다자녀유형 매입임대에 無보증금 또는 보증금 50% 할인 적용('20.4~), 전세임대는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인하

○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및 지원확대 위한 예산편성

'21년 약 20.3만명에 7,320억원 지원(1인당 361만원) 및 '22년 지원 대상 확대 위한 예산확보

\* 다자녀 장학금 예산 : ('21) 759,095백만원 → ('22) 917,995백만원



### 3. ['22년 추진계획] 영아기집중투자 시행, 다자녀 주거학비지원 확대

#### ■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시행

-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영아수당, 첫만남이용권 시행
  - (육아휴직 급여 확대)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급(3+3), 나머지 기간도 급여 상한 120만원 → 150만원으로 인상
  - (영아수당) '22년생 연 181만 건(월 15.1만 건) 지급 추진
    - \* 1.3부터 신청받아 1.25. 최초 지급 개시(4,500건)
  - (첫만남이용권) '22년생(약27.5만명\*) 대상 지급 추진(1.5.부터 신청, 4.1부터 지급 시작)
    - \*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('19) 기준 중위(30만명), 저위(24.3만명)의 중간값으로 '22년 예산 편성
- ☞ 기존 제도(1년 최대 3,720만원) 대비 지원액 31.8% 확대(1년 최대 4,880만원)
- 지급절차, 방법, 소급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
- 신규도입 제도 정착·인식 개선 위한 적극 홍보 및 집행관리 실시

#### ■ 영유아기 공적 돌봄 지속 확대

- '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 위한 공공어린이집 지속 확충('22년 목표 550개소) 및 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
  -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\*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(농어촌 등)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 제고
    - \*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별도 물량 배정 및 완화된 선정 기준 적용하여 지자체 신청 물량 대비 **75% 최종 선정**(일반 민간·가정어린이집의 경우 **27.3%**)
  - 신규 확충·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 진행(~'20)
    - \*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·컨설팅·특강 실적 : ('21) 1,732명

##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·교육 지원 확대

### ○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위한 주택 지속 공급

- (신규건설임대) 중형평형 0.6만호 사업승인
- (그린리모델링)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(52㎡)로 통합하여 200호 공급
- (매입·전세임대) 매입임대 2천호, 전세임대주택 3천호 사업승인

### ○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·대상 확대 지원

- 기초·차상위 가구 학생 지원단가 인상\*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시행

\* 연간 520만원 → 첫째700만원,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

〈 참고 : '22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인상(단위:만원) 〉

구분		기초·차상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	7구간	8구간
4인가구 기준중위소득* 대비		-	~30%	~50%	~70%	~90%	~100%	~130%	~150%	~200%
'21년	다자녀(셋째이상)	520	520	520	520	450	450	450	450	450
↓										
'22년	다자녀	첫째,둘째	700 (둘째 전액)	520	520	520	450	450	450	450
		셋째이상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

\* '22년 중위소득(4인 가구 기준) 5,121,080원

- 자녀 이상 가정의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시행하여 학자금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

※ 자녀 셋 이상인 경우,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한 소득인정액\*을 활용

\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월) + 재산의 소득 환산액(월) - 인적 공제 총액